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3543
----------	-------

발의연월일 : 2023. 7. 28.

발 의 자 : 윤재옥 · 강기윤 · 강대식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권성동 · 권영세 · 권은희
김기현 · 김도읍 · 김미애
金炳旭 · 김상훈 · 김석기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선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김 웅 · 김정재 · 김태호
김학용 · 김형동 · 김희곤
김희국 · 노용호 · 류성걸
박대수 · 박대출 · 박덕흠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박정하 · 박 진 · 박형수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현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안철수 · 양금희 · 엄태영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윤두현 · 윤상현 · 윤영석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이양수 · 이 용 · 이용호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성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이태규 · 이현승 · 임병현
임이자 · 장동혁 · 장제원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정동만 · 정우택 · 정운천
정점식 · 정진석 · 정찬민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조수진 · 조은희 · 조해진
주호영 · 지성호 · 최승재
최연숙 · 최영희 · 최재형
최춘식 · 최형두 · 추경호
태영호 · 하태경 · 한기호
한무경 · 허은아 · 홍문표
홍석준 의원(112인)

주 문

올해는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민간인 및 군인 사상자, 수십만의 전쟁고아와 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민족사 최대의 비극임.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정전체제의 원인 역시 전후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존속이 불가피한 실정임.

북한은 2022년 총 37회 79발의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라는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며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NLL이남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기도 했음. 금년에도 7월 27일 기준 총 17회 34발이상의 탄도·순항미사일과 우주발사체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술핵무기, 핵수중무인잠수정 등으로 대남 핵공격 의지를 피력하며 추가적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와 핵무기시험·생산·보유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할 것과, 남북 및 관련국이 북한의 핵폐기 및 사찰에 합의한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2.29합의, 4.27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및 탄도·순항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뿐임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함.

국회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및 탄도·순항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뿐임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함.

국회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

의와 핵무기시험·생산·보유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할 것과, 남북 및 관련국이 북한의 핵폐기 및 사찰에 합의한 제네바 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2.29합의,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함.

국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